경선 과열 '명낙대전'… 대선 레이스 '원팀' 가능할까

경선 후폭풍으로 대선 우려 커져
두 후보 지지자간 갈등 골도 깊어
투표 포기 등 미온적 참여 가능성
지지자·후보자 화합 가장 큰 숙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연설회(2차 슈퍼위크)에서 이낙연 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의 끝이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 경기와 서울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대선 본선에 나갈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2차 슈퍼위크 결과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 유력해진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이후 대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명낙대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하게 경쟁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지지자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경선은 말 그대로 후보 선출을 위한 일종의 예선전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경선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당 대 당의 선거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선 국면에는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일정이나 기획을 조정하고, 실제 바닥민심을 움직이는 선거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유세를 발판 삼아 세(勢)를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는 양상으로 흘러간다.

경선 이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후보 선거캠프에 있던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통합 선대위에 합류해 '원팀'을 꾸릴 가능성은 크지만, 실제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투표 포기 등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낙연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못 찍겠다는 사람이 조사 결과 30% 이상인 것으로 나온다"며 "(원팀) 노력은 하겠는데 지지자 3분의 1이 우리가 설득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선 과정을 취재하며 만나거나 본지와 통화를 했던 지지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과 대장동 의혹, 네거티브를 꼽았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비토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남경필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2012년 대선에서도 일부 의원들과 후보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당 관계자의 발언도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07년 대선 때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투표를 포기해 정권이 넘어간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완벽한 마무리와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2007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캠프에서도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들어 화합의 장을 만드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로서는 경선 기간 중 깊어진 지지자들의 갈등의 골을 봉합하고, 대선 후보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것도 큰 숙제다. 그래서 중앙선대위를 구성할 때 이재명 경선 캠프에 있던 인사들의 2선 후퇴도 화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민주당원의 저력은 치열한 경쟁과 경쟁 후 화합을 거쳐왔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경쟁은 뜨겁게, 경쟁 후엔 하나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선거를 통해 이뤄왔던 경험이 있고, 경험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원들은 후보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있겠지만, 민주정부 4기를 재창출해야 한다는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윤석열 vs 유승민 '무속 논란' 캠프간 설전

토론회후 '정법' 언급하며 대립
보도 이후 각 캠프서 공격·해명
윤 "흠집전략" vs 유 "후보검증"

최근 치열한 '무속 논쟁'을 벌인 국민의힘 대권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2021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무속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간 논쟁이 7일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난 5일 밤 마지막으로 열린 KBS 주최 6차 TV토론을 마치고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 간 '정법(正法)'을 말하며 설전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일까지 각 캠프의 공격과 해명이 이어졌다.

정법은 6차 토론에서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이런 사람 아느냐"고 물었던 천공스승, 진정스승이라 불리는 인물이 강의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윤석열 캠프는 토론회 직후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과 악수를 나누면서 가슴팍을 밀었다는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 전 의원에게 악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중에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 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유승민 캠프는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악수를 하고 지나가려고 했으나 윤 전 총장이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면전에 대고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무속 논란에 대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 4강 이후에는 디테일한 정책으로 승부를 할 것"이라며 "정법 유튜브 강의가 2분 이상 듣기 어려운데,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도 후보의 검증 카테고리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은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토론 6번 하는 동안에 저희를 트집잡는데, 1등 후보를 흠집내서 자신이 이득을 보겠다는 단순한 전략 같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의 신경전은 지난달 9월 23일 2차 TV 토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틀 후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논평을 내 이를 반박하며 "유 후보에게 오히려 물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과거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을 모아 2억여 원을 장만했다는 본인 장녀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3차 토론회에선 양 후보 간 신경전이 전면에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하며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이거는 정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은 30초를 추가로 발언할 수 있는 찬스를 쓰며 "정말 묵묵하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며 "또 유승민 후보님도 부친과 형님이 다 법관 출신 변호사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4차 토론회에선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며 반박했으나 유 전 의원은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의 그 수많은 비리가 나와도 제가 말 한마디 안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벌써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하신다"고 토론회 때 마다 공방을 이어나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文 "저탄소 경제전환, 국제사회와 공유"

'아·태 환경장관 포럼' 영상 메시지
"아·태 지역 기후위기에 취약
탄소중립 행동 더욱 빨라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축사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이라며 "한국은 저탄소 경제 전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그린 ODA를 확대해 개도국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구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이다. 그만큼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 국가들의 행동 또한 더욱 빨라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019년 기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가운데 40% 수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인 만큼 문 대통령도 '탄소중립을 통한 지구환경 회복'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아·태 환경장관 포럼은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 공동 주최로 지난 5일부터 열렸다. 포럼에는 39개 회원국에서 장관급과 고위급 실무대표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기업 등이 온·오프라인 형태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포럼 마지막 날인 장관급 회의에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 대해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중심 다자회의이자, 유엔환경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매우 중요한 사전 준비 회의"라며 "오늘 포럼이 아·태 국가들의 행동을 결속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구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 위기'와 관련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같은 녹색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결합을 통해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한층 강화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계획도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상에너지 투자를 늘리며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 준비 상황을 평가한 뒤 "정부 역시 2050년까지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산업계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